

다시 민주노조답게, 총파업을 조직하자!



민주노총은 4.11 총선 이후 총파업 투쟁 계획을 재확인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지도부를 밟고 가라”며 총파업을 호소했다. 하지만 지역과 현장에서는 8월 총파업 투쟁이 또 한 번의 선언으로 그칠 것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여소야대는 실패했고 현장에서의 투쟁 준비는 부족하며 투쟁과제에 대한 여론 쟁점화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도부의 일방적인 총선방침 밀어붙이기는 조직에 깊은 갈등과 분열의 골을 남겼다. 따라서 여소야대를 전제로 수립되었던 민주노총 투쟁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총선대응의 문제가 무엇이었던지 확인하고 2012년 투쟁 계획을 바로 세워야 한다.

노동정치 실종을 자초한 무원칙한 야권연대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정책협약 체결 및 후보지지·지원활동을 통해 야권의 정당, 후보들과 어느 때보다 밀착된 관계를 가졌다. 심지어 “민주통합당이 1당이 되도록 협력하고,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을 지지한다”는 굴욕적인 정책협약까지 맺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정작 총선에서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는 부각되지 못했고 노동정치는 실종되었다. 노동법 전면재개정,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자 투표권 등은 총선 이슈에서 주변으로 밀려났다.

한편 민주노총 집행부가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야권단일화 후보에 대한 지지, 통합진보당으로의 비례투표 집중을 내용으로 하는 총선방침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분열되었다. 한미 FTA를 체결하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했으며, 노사관계로드맵을 만든 민주당, 국참당 등

구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방침은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역과 현장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 결과 민주노총과 노동자운동은 존재감을 상실했다. 노동자도시 울산, 거제, 창원에서조차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후보들은 모두 낙선했다. 울산에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2010년 지방선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당득표율을 보였다. 노동정치의 실종과 무원칙한 야권연대가 야기한 결과였다. 이후 정치방침, 대선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과 지역에서 투쟁을 복구하자

다시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노동조합의 힘을 복구하고 투쟁을 조직하여 전국적 전선으로 묶어내면서 자신감과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총선을 통해 드러났듯이,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치권 활용 전술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도 못할뿐더러 지역과 현장 노동자들의 패배감과 사기저하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총선 시기 갈등과 분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비판적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 단결과 투쟁의 동력을 모아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우선 쌍용자동차 투쟁과 언론노조 파업을 사수하면서 6월에 예정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해나가자. ‘죽음을 딛고 노동해방 그날에 꼭 살리라’는 동지적 결의로 쌍용차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함께 씻자. 지역거점별로 마련된 분향소를 중심으로 5월 19일 범국민추모대회를 대대적으로 조직하자. 이러한 흐름을 이어

유류세 폐지 및 기름값 인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6월 건설-화물 공동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자. 아울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활용한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을 분쇄하고 장시간-야간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현장 투쟁을 엄호하자. KTX 민영화에 맞선 철도 노동자 투쟁도 노동자 전체의 지지가 필요하다.

불신과 냉소를 넘어, 실질적인 투쟁동력을 복구하자

당면 투쟁의 성패가 8월 말 총파업 투쟁을 좌우할 것이다. 지역과 현장에서는 8월 총파업 투쟁이 성사되겠다는 불신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연맹과 금속, 공공 등 주요 산별연맹 지도부부터 투쟁을 확대하고 현장을 조직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과 현장에서 분투하는 간부와 활동가들은 지도부와 ‘뺑파업’에 대한 냉소를 넘어 현장 간담회와 지역 연대 투쟁을 조직하면서 총파업의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사실 총연맹의 여소야대 올인 전술과 무관하게 수많은 헌신적인 지역과 현장 활동가들이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다.

122주년 노동절을 맞는 민주노총의 현실은 선배 열사들에게 송구스러울 정도로 좋지 못하다. 정권과 자본의 공세 속에 현장이 갈가리 찢긴 탓도 있지만,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잃어버린 탓이 크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다는 각오로 무너진 현장을 복구하고 민주노조의 긍지를 다시 세우자.

민주노총의 재벌개혁 투쟁,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문제들을 확 바꿔야 한다

민주노총(금속노조)이 5월 '재벌개혁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자동차·전자·철강·기계 등 제조업 전반을 장악하고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악순환을 강요해온 대기업들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급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주노총의 재벌개혁 투쟁은 '진정한 산업경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조로 △재벌 지배구조 개선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노동자 경영참여 보장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 노동자, 소비자,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국민적 수준의 재벌개혁동맹으로서 '재벌개혁 시민연대'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자본 vs 자본인가, 자본 vs 노동자인가

우선 기조를 '진정한 산업경제의 민주주의 실현', 즉 '경제민주화'로 설정하는 것은 큰 오류다. 경제민주화론은 재벌 문제의 초점을 대기업의 경

제력 집중이나 총수일가의 탐욕에 맞춘다. 다시 말해서 재벌과 노동자 사이의 계급투쟁이 아니라 재벌총수와 소액주주,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따르면 재벌 지배구조의 개선이나 원하청 공정거래와 같은 '자본주의의 공정한 시장 경쟁 법칙'을 정립하는 것이 대안이 된다.

노동자와 소액주주의 동맹?

실제로 민주노총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소액주주를 재벌개혁을 위한 제1의 동맹 대상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란 상식과 달리 개미투자자가 아니라 연금기금과 투자신탁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의미하고, '소액주주 운동'은 주주가치의 최대화를 주장하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를 의미한다. '주주가치 최대화'는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 실현이나 배당금 분배를 목표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강요한다. 또한 '주주가치 최대화론'은 금융시장 개방과

맞물려 외국계 투기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을 대거 잠식케하는 결과를 낳았다. 단적으로,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경우 외국인이 각각 40~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개혁을 위해 소액주주를 활용한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법은 노동자에게 '죽거나 나쁘거나'일 뿐이다.

원하청 공정거래가 아니라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또 민주노총은 '원하청 공정거래'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라는 담론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윤을 공유해야 한다는 논리는, 기업의 이윤이 결국 노동자에 대한 착취라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한다. '원하청 기업간 공정거래'가 아니라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으로 그 문제들이 전면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업종 전체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일괄 통제하는 재벌이 산별교섭에 참여하도록 조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군사력 증강, 호전적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노동자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반도 상황이 날로 험악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13일 로켓 발사를 단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성명을 내고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한 어조로 규탄하며,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예고했다. 4월 18일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서울 한복판이라도 통째로 날려 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등 전례 없이 강경한 언사를 쏟아냈다. 추가적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국 정부는 강경한 대응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약하면 북한이 도발을 한다며 "강력한 (무기)성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곧이어 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과 실전 배치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가 1천km에 달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의 강경기조와 강화되는 한미동맹

최근 북한의 강경한 언사는 미국과의 대화를 빨리 재개시키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 북한이 원하는 식량이나 에너지 지원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북한은 한국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취해 왔다. 여기에 김정은의 강한 이미지를 홍보해 아직 어린 지도자의 후계 체계를 안정화하겠다는 의도도 덧붙는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난 3월 말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20개국 이상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을 조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완전히 동일하다며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었다.

오바마 정부는 군사력 증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왔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매년 그 호전성을 더해 가고 있고, 올해는 평양 점령을 염두에 둔 상륙 훈련도 부활했다. 미국은 세계적인 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병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의 강경 대응은 협상이 빨리 재개되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정 보장도, 한반도의 평화도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알리바이를 제공할 뿐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문제는 북한과 한미의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연평도 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날로 그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노동자 민중의 몫이 된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지배세력은 '국가 안보'를 빌미로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다. 또 북한의 도발을 막는다는 빌미로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고, 민중의 삶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사회적 자원은 한국의 전쟁광들과 미국 군수 자본의 주머니로 흘러든다.

전쟁 위기는 노동자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킬 뿐이다.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력 증강, 호전적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투쟁에 노동자 민중이 함께 나서자!